

최근 일본의 대외 통상정책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은 FTA, WTO, 지역협력 등 3자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시키는 중층적인 대외통상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노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실현을 주도,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하여 무역투자자유화의 규범제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전략적 대응임을 밝힘

□ WTO·FTA·지역협력의 상호보완적인 대외통상정책

- 일본의 대외통상정책은 무역·투자자유화에 대한 2국간 접근을 중심으로 한 FTA, 다자간 접근을 중심으로 한 WTO, 지역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 등 3자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시키는 중층적인 대외통상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이 3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일본 산업구조심의회·통상정책위원회에서 발표된 「통상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하여 최근 일본의 주요 통상정책 현안을 정리

1. FTA 정책

- 노다 총리는 금년 시정연설에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실현을 주도, 높은 수준의 FTA를 통하여 무역투자자유화의 규범제정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전략적 대응임을 밝힘

- 이에 한·일, 일·호, 한·중·일 및 ASEAN을 중심으로 한 광역 FTA의 조기교섭 개시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TPP 교섭 참가를 위한 관계국과의 협의를 추진, 아울러 일·EU FTA의 조기교섭 개시방침을 표명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작년 11월 하와이 APEC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교섭참가 의사를 표명한 이후, 대외적으로 9개 교섭참가국들과 협의 진행
 -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브루나이, 페루, 칠레 등과 교섭참가 조건, 관세철폐 범위 등을 협의 중
- 그러나 대외적으로 9개국 모두 일본의 교섭참가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대내적으로 반대파들과의 조정,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등 난제가 적지 않음

□ 한·중·일 FTA

- 노다 총리가 5월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북경을 방문,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 예정.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FTA 교섭개시에 관한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4월까지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 정상회담에서 FTA교섭 개시에 서명한다는 수순을 취하고 있음
 -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주도로 아시아자유무역권을 추진할 방침을 확인

□ 일·EU FTA

- 작년 5월 일·EU정상회담에서 교섭개시 방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교섭 범위에 관한 작업이 실시 중
 - 금년 1월 노다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일·EU FTA의 조기 교섭개시 방침을 표명, 이에 EU측도 교섭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

- 중국이 제안한 EAFTA[East Asian FTA(ASEAN+3:한국·중국·일본)], 일본이 제안한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East Asia:동아시아 포괄적 연대(ASEAN+6: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를 조정한 것으로 ASEAN이 제안
 - 이 제안을 토대로 무역·투자자유화에 관한 작업부회(WG)를 금년 중 빠른 시기에 설치하기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합의

2. WTO 정책

□ 보호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최근 보호주의 움직임의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상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국제적인 규제에서(수출입 제한) 국내적인 규제(규제, 규격, 보조금 지급 등)로 전환하는 등 보호주의 수법이 다양화되는 점을 우려
 - 이에 일본은 특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국간 협의, WTO분쟁처리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확산을 억지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

□ 미국과 일본 주도의 2개 협정 타결

- ACTA(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 서명
 -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없는 새로운 조치를 제정
 -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8개국, EU회원국중 22개국이 서명, 발효는 6개국이 비준한 30일 후
 - 앞으로 ACTA의 지적보호수준을 신흥국들에 확대(ACTA가맹국 확대, FTA에 ACTA와 동등한 조치 규정 등)
-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정보기술협정)
 - IT제품의 무관세화 협정으로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확대 교섭에서 신형 집적회로, 리튬이온 전지, 의료기기(전자내시경), 디지털TV카메라 등이 추가 대상품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3. 지역협력 정책

□ APEC

- 일본은 APEC을 FTAAP를 위한 협력체, 그리고 TPP의 중간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
- APEC-환경물품·서비스(EGS)의 무역투자자유화에 관한 일본·미국·호주·뉴질랜드 공동제안 합의(2015년까지 환경물품의 관세 5%이하로 인하 등)

□ 동아시아서미트

-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 동아시아 포괄적 연대(RCEP)를 지향, 무역·투자자유화에 관한 작업부회(WG)를 설치키로 함
- 민·관 일체로 패키지형 인프라사업 추진
 - 일본·ASEAN회의에서 ASEAN에 대한 「플래그쉽프로젝트」(사업규모 2조엔) 등 다양한 인프라관련 사업 추진
 - 동아시아서미트에서 아시아중합개발계획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연결성 마스터플랜·플러스」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합의
- 에너지 협력 강화
 - ERIA(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를 핵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에너지협력 강화에 합의
- 일·아세안간 경제관계 강화
 - 일·ASEAN간 전략적 비전을 공유, 산업계도 포함, 향후 10년 로드맵 책정 등

□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

- 각국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중국, 인도, 아세안, 미얀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중아시아 지역 등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

4. 시사점

- 앞에서 언급한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중층적인 접근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우에도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외통상정책의 스탠스임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ASEAN이 제안한 RCEP는 중국이 제안한 EAFTA와 일본이 제안한 CEPEA의 타협안으로서,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시사
 -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일본의 한·중·일FTA 교섭과 TPP교섭 진행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
- ACTA와 ITA 등 WTO 관련 2개 협정 관련 분야,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다양한 무역규제 움직임이 있는 분야는 일본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나 또는 일본에 악영향이 미치는 우려되는 분야로서 일본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지역협력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최근 닛케이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수출확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방어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했듯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통상정책은 아시아 신흥국 지역에서의 각종 해외사업의 잠재력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통상정책의 현황과 주요과제』, 경제산업성, 2월29일